

제16회 대학(원)생 지식재산 우수논문공모전

# 지식재산권 분야의 최근 동향

2021. 7. 20. 김 시 열

# 목 차

1. 지식재산권의 개념 및 체계
2. 글로벌 지식재산 주요 이슈
3. 2020년 지식재산 10대 이슈

# 1. 지식재산권의 개념 및 체계

## 지식재산권의 개념

### ➤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1호, 3호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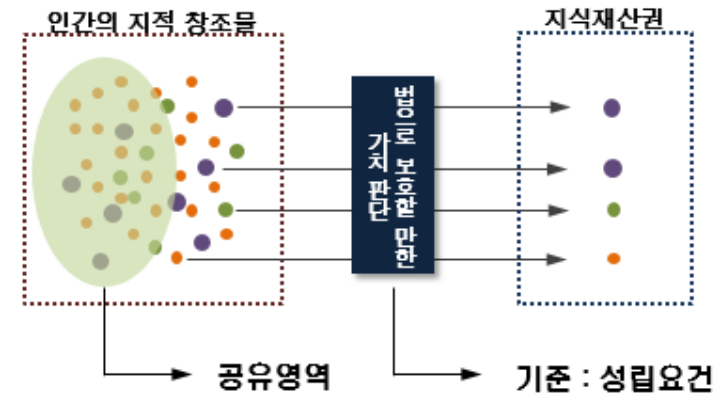
-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의미
-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의미

### ➤ 지식재산

- 무체물(창작, 표지, 투자...)
- **부당한 모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정보**
  - \* 부당? →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 보호되어야 할 가치? → 경제적 가치(재산으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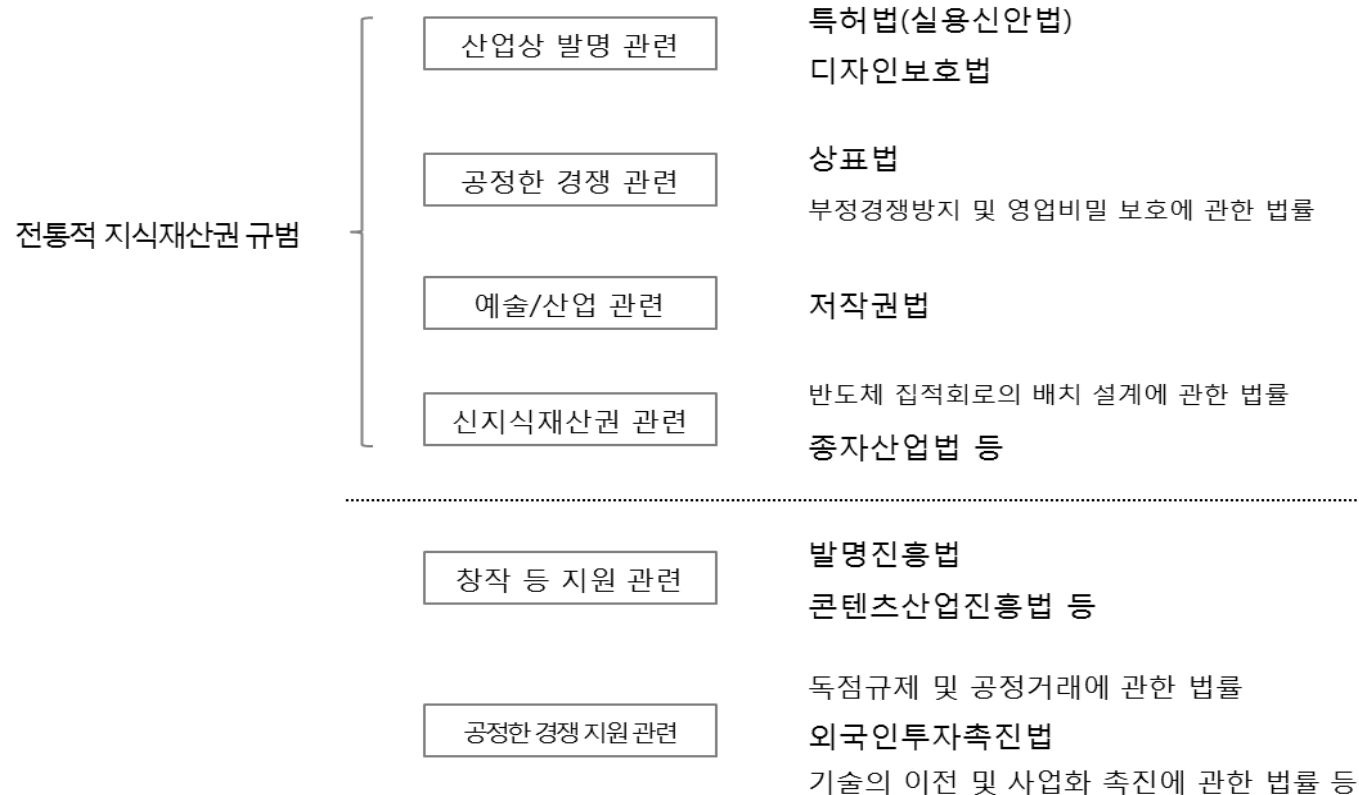
### ➤ 지식재산권

- 권리의 내용 : 배타적(독점), 처분권, 물권(소유권)과의 차이
- 지식재산권법 : 지식재산 + 권리 + 법



# 1. 지식재산권의 개념 및 체계

## 지식재산권 규범 체계



# 1. 지식재산권의 개념 및 체계

---

## ■ 지식재산권의 특성

### ➤ 지식재산권의 확장성

- 특정한 대상만을 지식재산으로 한정한다기 보다, 현실에서의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식재산권의 객체가 되는 지식재산의 범위는 계속 변화 및 확장되어 오고 있음
- 퍼블리시티권, 지리적 표시, 소프트웨어, 아이디어 탈취 방지 등

### ➤ 일반규정을 통한 규제 방식 활용

- 모든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식재산의 특성 상 일반규정을 활용하여 법체계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부정경쟁방지법 및 저작권법 등이 대표적

### ➤ 지식재산권 법체계의 목적

- 보호근거 : 헌법 제22조 {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한다.
- 권리자의 사익 v. 국가 및 사회의 공익

## 2. 글로벌 지식재산 주요 이슈

---

### 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지식재산권

#### ➤ 메타버스(metaverse)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 가상 현실을 전제로 하는 특징으로 인하여 기존에 발생하지 않던 새로운 지식재산권 침해 형태가 문제되기 시작
- 현실과 다른 상표사용 문제, 상표의 희석화 문제와 같은 가상현실에서의 상표권 침해/ 저작물의 부수적 이용에 대한 문제/ 저작권과 디자인의 중복 보호 문제 등이 대표적인 문제로 대두

#### ➤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의료발명에 대한 특허권 부여

- 우리나라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부정하여 특허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데, 의료 산업의 광범위한 발전으로 인하여 인간 대상 의료행위를 특허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
- 의료행위의 경우 산업 간 경계와 행위주체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부정되는 의료행위라고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회색지대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논의되고 있음

#### ➤ BM 및 SW발명의 특허적격성

-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어 감에 따라 최근 미국은 SW발명의 특허적격성 판단의 기준을 완화(가이드라인 발표, 2019)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들 대상 발명에 대한 법정정책적 대응의 필요가 요구

## 2. 글로벌 지식재산 주요 이슈

### ② BM과 SW 관련 발명의 부각

➤ 미국은 주로 특허대상 적격성 차원에서 SW와 BM의 특허적격성을 다루어 왔으며, 최근 지나치게 높아진 이들 발명에 대한 특허적격성 기준에 대한 반발이 있어왔는데, CAFC는 The Enfish v. Microsoft 사건 판결 등을 통하여 새로운 기준 제시 및 발명성립성 인정 기준을 완화

➤ USPTO는 Alice 판결 이후 SW와 관련한 청구항들에 대한 특허적격성 심사 시 많은 혼선이 있어왔던 것을 개선하고자 많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왔는데, 최근 2019년 1월 4일 그간의 가이드라인에서 지적되던 문제를 개선하여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

–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Alice 판결의 2단계 테스트를 명확히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며, SW 등의 특허적격성 기준을 완화하여 특허 대상을 확대하려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평가

| 구분  | 미국법리  | 유럽법리                              | 우리나라  |
|-----|---|-----------------------------------|---|
| 성립성 | 높은 문턱<br>용이하지 않은 기술의 적용을<br>성립성 결여로 판단        | 낮은 문턱<br>기술적 특징의 존재 필요            | 낮은 문턱<br>하드웨어와 연계되는 경우 성립성<br>인정              |
| 진보성 | 낮은 문턱<br>(발명 전체 판단, 비기술적 요소의<br>진보만으로 진보성 판단) | 높은 문턱<br>(비기술사항 여과, 기술적 진보<br>필요) | 낮은 문턱<br>(발명 전체 판단, 비기술적 요소의<br>진보만으로 진보성 판단) |

※ 김원오, “언택트 시대, BM과 SW관련발명의 부각에 따른 지식재산정책 재검토”, Global IP Trend 2020, 71면.

## 2. 글로벌 지식재산 주요 이슈

### ③ 지식재산으로서 데이터의 등장

➤ 비정형데이터의 경우 **현행법상 법적 보호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데이터를 법적 보호의 객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데이터 보호 논의의 이유는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한 데이터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다면 누구도 거래를 위하여 데이터를 선뜻 내놓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

–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 v. 경쟁법적 행위규제 방식

<산업디지털전환법(안) 제9조제1항>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해당 산업 데이터를 가공, 분석, 이용 제공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여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

<데이터기본법(안) 제12조>

“데이터생산자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함으로써 데이터제작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데이터거래에서 지식재산권 귀속 문제

– 데이터거래에서 지식재산권 귀속 문제는 중요한 쟁점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데이터 거래 표준계약서는 대상데이터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규정을 두고 있음

➤ 데이터의 가치평가

– 실무적으로 데이터 가격산정은 쉽지 않고 신뢰성있는 가치평가 모델이 없는 상태이므로, 산업계는 정부가 데이터 가치평가 모델을 정립하고 지원해줄 것을 요구

## 2. 글로벌 지식재산 주요 이슈

---

### ④ 기후변화와 지식재산

➤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 확보가 중요한데, 국내외에서 이들 기술 분야에 대한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연구개발투자 및 기술 확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중

–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관련 기술을 통한 지구온난화 대응 및 기후 관련 신시장 선점을 위해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기술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기술 관련 녹색/기후기술에 대한 분류체계를 마련

– 기후기술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국내외 기후기술 정보 DB 제공을 위한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현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

➤ OECD의 기후변화 완화기술 분야 특허통계를 활용하여 해당 기술 분야에서의 특허활동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발명자가 출원한 특허가 전 세계 기후변화 완화기술 특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기준 약 19.7%로 양적규모에서는 일본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질적수준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관련 기술 분야에 있어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술/특허를 확보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줌

## 2. 글로벌 지식재산 주요 이슈

### ⑤ 코로나19 공중보건의 위기와 특허권의 과제

➤ 세계 각국은 코로나19의 긴급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통제, 관리하기 위해서 진단 및 의료기기, 치료제 등과 관련되는 특허기술을 강제실시할 수 있도록 각국의 강제실시제도를 정비하고 있음

– 특허권자의 실시만으로는 코로나19 대응 필수물품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와 만의 하나 특허권자가 타인에게 실시권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 국가  | 강제실시의 근거    |   | 특허권자 보상   | 강제실시권 발동 여부             | 국가  | 강제실시의 근거   |  | 특허권자 보상                                   | 강제실시권 발동 여부             |
|-----|-------------|---|---|-------------------------|-----|------------|--|---|-------------------------|
| 한국  | 기존제도        | (특허법 제106의2)<br>국가 비상사태, 국도의 긴급상황,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가능   | 특허권자에게 정당한 보상금 지급   | 코로나19 관련 강제실시권 발동 사례 없음 | 프랑스 | 기존제도       | (지식재산권법 제L.613조~616조)<br>특허 이용이 공중보건 이익에 반하는 경우, 공급 수량이 불충분한 경우, 국방상 이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           | 특허권자와 실시권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 파리 1심 민사법원에서 보상금 산정 | 코로나19 관련 강제실시권 발동 사례 없음 |
|     | 코로나19 대응 조치 | (보상금/대가 산정기준 고시제정)<br>특허권수용규정 제5조의2의 산식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관 3개소를 선정하여 평가 의뢰  | 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                                     |                         |     | 코로나19 대응조치 | (국가 공중보건 법(Public Health Code) 개정)<br>총리는 국가 위생 재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물품 및 서비스를 압류할 수 있음          | 프랑스 국방법(French Code of Defense) 적용        |                         |
| 캐나다 | 기존제도        | (특허법 제19조~19.3조)<br>캐나다 정부 또는 주 정부의 신청에 따라 그 정부에 의한 특허발명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음  | 허락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적절한 보상금으로 산정된 금액 지급                              | 코로나19 관련 강제실시권 발동 사례 없음 | 독일  | 기존제도       | (특허법 제13조)<br>연방 정부가 공공복지 또는 국가안보를 위해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음  | 독일연방정부가 적절한 보상금 지급                        | 코로나19관련 강제실시권 발동 사례 없음  |
|     | 코로나19 대응조치  | (특허법 개정 제19.4조 신설)<br>- 특허청장은 보건부장관의 신청에 따라 공중 보건의 긴급상황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특허 발명을 제작(make), 구성(construct), 사용(use) 및 판매(sell)하도록 승인해야 함<br>- 본 조에 의한 권한은 20년 9월 30일 이후에는 부여할 수 없음 | 허락의 경제적 가치와 특허 발명의 제작, 건설, 사용 및 판매의 정도를 감안하여 적절한 보상금으로 간주하는 금액 지급 |                         |     | 코로나19 대응조치 | (인간 감염증 예방 통제법 개정)<br>- 연방보건부는 특정 성분, 의약품, 의료 장비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음<br>- 동 조항은 2021년 3월 31일 자동 만료 |   |                         |

### 3. 2020년 지식재산 10대 이슈

#### ① LG-SK 배터리(영업비밀) 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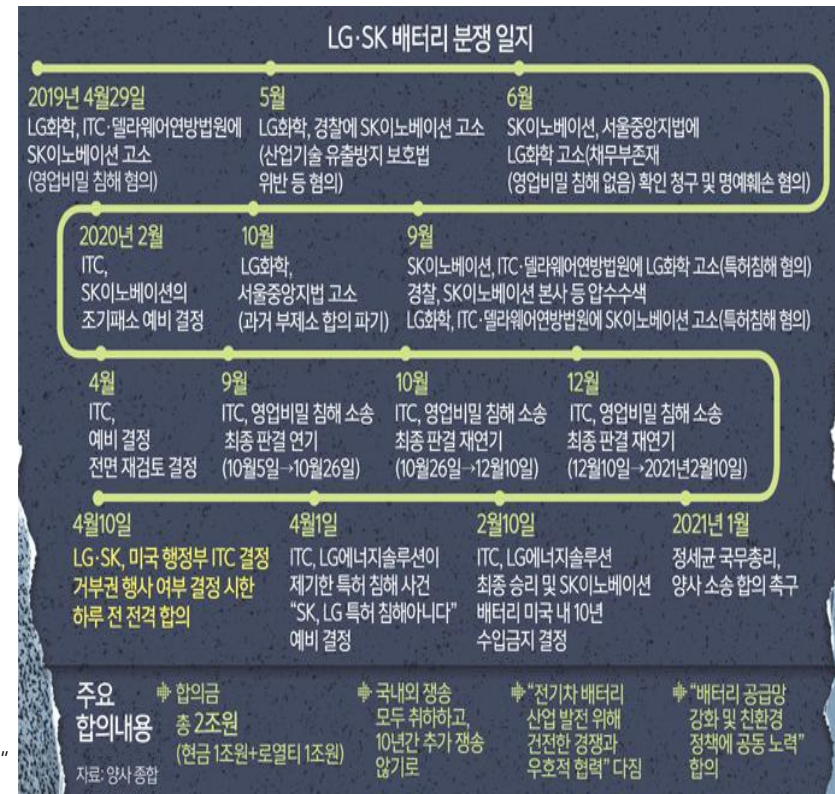
➤ 2011년 12월 LG화학의 SK이노베이션 대상으로 한 배터리 소재 분리막(SRS) 특허의 침해금지 소를 제기(서울중앙지법)함으로써 시작된 분쟁은 2019년 LG화학이 美 국제무역위원회(ITC) 등에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제소함으로써 많은 관심을 받은 사례

##### ➤ 주요 쟁점

- (영업비밀 침해) SK이노베이션의 증거보전의무(Litigation Holding Duty) 위반에 따른 소송 내 법적 제재(심문기일) 없는 조기 패소의 승인여부였음

- (특허침해) LG화학의 제소특허 4건 중 1건을 제외하고는 SK이노베이션이 특허심판원(PTAB)에 청구한 무효심판(IPR)이 모두 개시기각 결정되어 SK이노베이션에게 유리하지 않는 상황이었음

- (특허침해 ITC) SK이노베이션 특허의 발명자권 흠결에 대한 공방, SK이노베이션의 소송절차상 증거보전의무 위반에 대한 공방



※ 세계일보, 2021. 4. 12.자 기사, "LG-SK '배터리 분쟁' 극적 타결.. '10년간 휴전 선언' 득실·과제는?"

### 3. 2020년 지식재산 10대 이슈

---

#### ② 상표/디자인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 ➤ 악의적인 상표/디자인 침해, 아이디어 탈취에도 징벌적 3배 손해배상 적용

- (산재권 전반 징벌배상 적용) 2019년 특허법 개정으로 도입된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으로 확대 적용(2020. 10. 20. 시행)
- (아이디어 탈취 징벌배상 적용) 2019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도입된 악의적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아이디어의 부정한 탈취 행위 까지 확대 적용(2021. 4. 21. 시행)

##### ➤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판매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근거 명문화

- 그간 대규모 침해 시 권리자의 생산능력 초과 판매량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특허법 개정을 통하여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여 판매된 침해품에 대하여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실시권 계약으로 권리자가 받을 수 있었던 이익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함(2020. 10. 20. 시행)
-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도 동일한 내용의 개정(2021. 6. 시행)

##### ➤ 그 외 개정 사항

-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의 손해액 추정규정 중 사용료 산정 기준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개정
-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의 법정손해배상액의 최고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고의적 침해 시 3억원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개정
- 특허침해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

### 3. 2020년 지식재산 10대 이슈

---

#### ③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 ➤ 본격적인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정책 추진

- 2019년 지식재산 금융 1조원 시대를 맞이한 것에 이어,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7/2), 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개선 방안(9/4),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대책(10/29) 등 금융활성화 정책 추진 본격화
- 지식재산 담보대출을 받은 기업의 부실 발생 시, 최대 50%의 금액으로 지식재산권을 매입하여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해주고, 매입한 지식재산권의 라이선싱 또는 매각 등을 통해 수익화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지식재산담보 회수지원기구'가 출범(2020. 2.18.)
- 투자자 성향에 맞는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을 출시하자는 취지에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와디즈)과 특허관리전문회사(ID) 간의 협업을 통해 지식재산 크라우드펀딩 1호 상품 출시(2020. 7. 15.)
- 특허공제 사업위탁 운영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공제 가입기업에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 출시(2020. 7. 27.)

##### ➤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2020. 7. 2.)

- 2024년 까지 IP금융투자 규모를 1.3조원 규모(2020년 800억원 → 2021년 2000억원 → 2024년 1조3천억원)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

### 3. 2020년 지식재산 10대 이슈

---

#### ④ 데이터 보호 및 특허 빅데이터 활용

##### ➤ 빅데이터 보호 및 이용 촉진을 위한 법적 과제 검토 및 발굴(국가지식재산위원회)

- 데이터 플랫폼 고도화를 통한 데이터 상호 연계 및 호환을 위한 표준 수립 및 품질관리
- 데이터 유통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 및 데이터 거래계약 유형별 한국형 거래 가이드라인 제정, 민간주도 데이터 거래소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데이터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추진(빅데이터에 대한 부정취득, 사용, 공개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 규율하는 부정경쟁방지법상 관련 규정의 신설 등)

##### ➤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 출범(특허청)

- 빅데이터와 AI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특허넷을 개통하여 고품질 특허서비스 제공(3/2)하여 심사와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개선 과제 도출 등을 가능하도록 할 인프라 구축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내 ‘국가특허 빅데이터 센터’ 개소(6/18)마련
  -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국가별 산업정책/규제 등 정책적 관점의 동향분석 추진(유망기술 발굴, 투자전략 도출, 정책제언 도출 등)
  - 벤처형조직 ‘특허빅데이터담당관’을 신설하여 선진 빅데이터 분석기법 및 인공지능 신기술을 접목해 특허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 및 활용하는 혁신플랫폼을 구축 예정

### 3. 2020년 지식재산 10대 이슈

---

#### ⑤ 코로나19와 강제실시권

##### ➤ 국경없는의사회, 코로나19 대응 치료제 등 특허권 강제실시 촉구

- 국경없는 의사회는 충분히 많은 공급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치료제 등 의약품, 백신에 관한 특허권 강제실시를 촉구(3/27)
- 국경없는의사회 자문위원들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 ‘렘데시비르’ 등에 관한 특허권의 독점을 제한하여, 충분히 많은 공급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모든 사람들이 관련 의약품 등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

##### ➤ 특허청,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을 위한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산정기준 고시’ 제정(6/22)

- 보상금 등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평가기관 3개소를 선정하여 발명의 평가를 의뢰하도록 하며, 각 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보상금액의 기준으로 함
- 그간 특허권자에 대한 보상/대가를 법정기준에 따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떤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혼란이 있었으나, 동 고시 제정으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와 같이 신규 발명특허의 강제실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

### 3. 2020년 지식재산 10대 이슈

#### ⑥ K-디스커버리 법제화 추진

##### ➤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제도 도입 추진(이수진 의원 개정안, 9/24)

– 특허침해소송에서 증거편재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저비용/고효율의 증거수집 절차를 도입하여 소송절차상 기업부담을 경감하고 특허권자 보호를 강화할 목적으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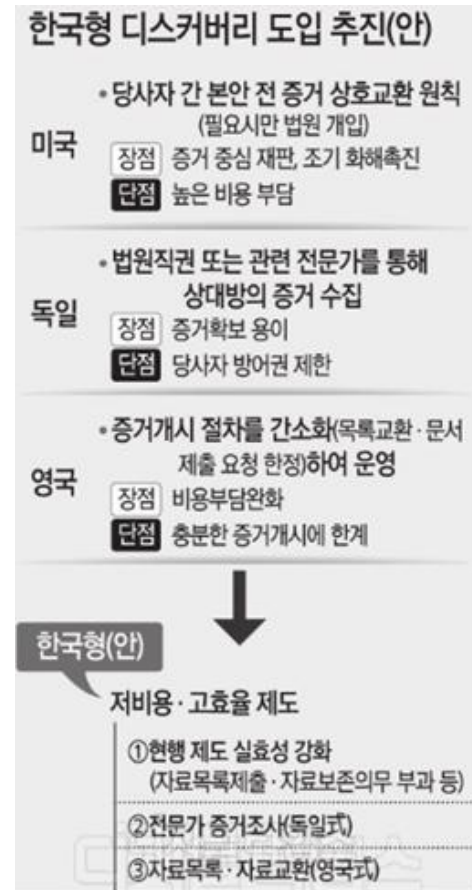
– 변론주의 체계 아래에서 기울어진 증거편재를 해소할 증거수집 또는 증거조사 제도의 개선은 발명자 보호 강화를 통한 발명 고치는 물론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악의 침해자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인프라로 인식

##### ➤ 산업계 의견

– (공감대) 후발주자에게는 상대방의 특허를 무효시키는 것보다 역공 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중요하다는 인식에 공감

– (다수기업 찬성) 국내 220여개 기업 중에서 140개 기업(약 80%)이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강화된 증거수집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

– (일부 소부장 기업 반발) 국내 칩 제조사(대기업)에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을 공급하는 일부 중견기업들은 국내 소부장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포트폴리오의 특허력이 글로벌 3사에 비하여 약할 뿐 아니라,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면 국내 소부장 기업의 장비 등이 특허분쟁에 노출되고, 이로 인하여 국내 칩 제조사들이 국내 장비 등을 구매하지 않게 될 것을 우려하여 반대



### 3. 2020년 지식재산 10대 이슈

#### ⑦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식재산보호 논의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미국 및 유럽연합(EU), 일본 등에서 인공지능과 지식재산에 대한 이슈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

– WIPO는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IP 분야에서 논의하거나 해결이 필요한 주요 질문을 전세계 회원국과 공유하면서 상호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정책이슈 초안을 제시

– 각국 특허청에서는 인공지능 발명 특허성 판단사례를 발굴하고 ‘인공지능 분야 심사실무 가이드’ 수립을 추진

➤ 인공지능 관련 IP 법제도 및 정책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를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AI-IP 특별전문위원회 운영(6/16)

- (1기) 특허·디자인/저작권/데이터 소위원회
- (2기) AI창작물/데이터/산업 및 정책 소위원회

| 국가 | 명칭(발간연월)  | 주요내용   |
|----|---|--|
| 한국 |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 분야 통계집('20.9.)   | 인공지능을 비롯,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국내의 특허출원 동향 및 미국의 동향 비교분석   |
| 미국 | AI와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공공의 견해 (Public View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20.10.)           | 인공지능이 지식재산 법체계에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이슈에 대한 의견을 수집, 정책적 고려사항을 확인   |
|    | AI발명:미국 특허를 통한 인공지능 확산의 추적(Inventing AI: Tracing the diffus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with U.S. patents)('20.10.) | 미국 내의 인공지능 관련 특허출원 동향 분석 보고서   |
| EU | 지식재산과 AI(Intellectual Property and Artificial Intelligence)('20.1.)   | 주요국의 AI 정책과, AI가 초래할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를 촉구, AI가 지식재산 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   |
|    | AI 입법권고안('20.10.)   | AI가 미칠 잠재적 영향력을 관리하기 위한 3개의 권고안을 채택, 이 중 Stéphane Séjourné 권고안에서 특허 및 새로운 창의 프로세스를 포함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고려의 필요성을 강조, AI 개발을 위한 법률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언급 |
| 중국 | 2020 중국 특허기술분석 보고서('20.11.)   | 중국 내 인공지능 관련 특허 출원 동향 분석 보고서   |
| 일본 | AI·IoT 기술 시대의 바람직한 특허제도에 관한 중간보고서('20.6.)   | AI 기술, DX 시대, 데이터 취급, IP 분쟁처리시스템 등의 현재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응방안을 검토   |
|    | AI 관련 발명 특허출원 보고서('20.7.)   | AI 관련 발명의 동향을 일본을 중심으로, 국내외의 상황 전반의 동향을 조사·분석  |
|    | AI 기술의 활용을 위한 활동계획 개정판('20.7.)  | AI 기술을 활용을 통하여 특허행정 사무의 고도화·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활동계획을 제시  |

### 3. 2020년 지식재산 10대 이슈

#### ⑧ 한류와 상표권 분쟁 증가

##### ➤ 한류 열풍과 상표 브로커에 의한 상표 선점

-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유통에 힘입어 전 세계에 한류 열풍이 나타나며, 이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현지 법인이나 개인들이 한류 브랜드를 상표권으로 선점하는 사례가 증가
- 상표 브로커들의 상표선점에 따라 각 국가별 제도의 미비와 헛점으로 국내 기업이 현지에서 자신의 상호 등을 상품에 사용하기 어려운 사례와 같은 불공정 거래가 심화되고 있음

##### ➤ 중국의 상표 브로커 단속 의지

- 자국 기업의 피해 증가와 국제적 비난 증가로 인하여 2017년 2월 상표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대량으로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하는 상표 브로커의 상표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이러한 노력에 의하여 우리 상표권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는 2018년 1,142건에서 2019년 684건으로 줄었으나, 다만 중국에서 활동하는 상표브로커 수는 줄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 기업의 대상이 대응력을 갖춘 대기업 및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에서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변화

##### ➤ 베트남 등 동남아 상표권 분쟁 추세

-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우리 상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한류 콘텐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브랜드를 상표로 출원하거나, 한글을 병기한 소위 한류 상표 출원이 증가하고 있음
- 동남아 국가들 중 우리나라에서만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를 선점하는 것을 제재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중소기업 브랜드를 상표로 현지에서 선출원하는 사례가 증가

### 3. 2020년 지식재산 10대 이슈

#### ⑨ 글로벌 통상에서의 지식재산 보호주의 기조(1)

#####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종료와 미국-멕시코-캐나다간 협정(USMCA) 발효(7/1)

– 미국이 참여하는 FTA 협상에서 지식재산권 부문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미FTA의 경우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강화된 USMCA의 지식재산권 부문의 내용은 향후 미국이 새로운 FTA를 체결하거나 기존 협상을 갱신/재협상 하는 경우 새로운 표준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USMCA의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내용]

| 구 분      | 주 요 내 용  |
|----------|--|
| 특허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특허지연에 대한 존속기간 연장(출원일 후로부터 5년, 심사청구일로부터 3년보다 낮은 경우)</li><li>농화학품에 대한 자료보호 기간 연장(5년→10년)</li><li>생물학적 제재를 포함한 의약품에 대한 자료보호(최소 10년)</li></ul> |
| 상표/지리적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소리상표, 단체표장, 증명표장, 유명상표의 보호</li><li>상표/지리적표시의 이익신청제도 도입</li></ul>   |
| 영업비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민형사 책임 강화</li><li>국영기업에 의한 영업비밀 부정취득 방지</li></ul>  |
| 디자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디자인 보호기간의 연장(최소 10년→최소 15년)</li></ul>  |
| 저작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완전한 내국민대우 보장</li><li>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저작자 사후 50년→70년)</li><li>기술적 보호조치 규정</li></ul>   |
| 집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온라인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 대한 세이프하버(safe-harbor)도입</li><li>영화 및 영상저작물의 캠코더 녹화에 대한 형사처벌</li><li>위성 및 케이블 신호 도용에 대한 민형사 책임 강화</li></ul> |

출처: 가장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무역협정, USMCA 발효(한국지식재산연구원 보도자료, '20.7.)

### 3. 2020년 지식재산 10대 이슈

---

#### ⑨ 글로벌 통상에서의 지식재산 보호주의 기조(2)

##### ➤ 미-중 지식재산 전쟁

- 2019년 12월 타결된 1단계 무역합의로 미중 관계가 완화되는 듯 보였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미국 경제와 공중보건, 안보에 큰 타격이 발생하여 보호주의 기조가 강화
- 지난 트럼프 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상계 관세 제도를 매우 강하게 활용하였는데, 이 반덤핑관세를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아니라 미국 양당 합의에 따른 의회의 입법을 통하였다는 점으로 인하여 현재 조 바이든 정부에서 이를 약화하는 데는 제약이 있을 것으로 판단

### 3. 2020년 지식재산 10대 이슈

---

#### ⑩ 중국, 지식재산보호 강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 단행

➤ 중국, 지식재산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 특허법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징벌적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배경) 개정 전 중국 특허법은 권리보호를 위한 입증이 어렵고 비용은 높은 반면, 손해배상액 및 과태료 수준이 낮아 이러한 점으로 인한 침해발생이 최근 미국과의 무역분쟁에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핵심 이슈로 부각된 이유로 지적
-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적인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침해의 경우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정배상액을 '1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 에서 '3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 로 상향
- (행정집행) 특허침해 관련 행정집행 권한을 현행법의 특허업무 관리 부서에서 특허집행 책임 부서로 까지 확대
- (의약품 특허) 혁신 의약품의 출시에 대한 심사 승인기간을 보상해주기 위하여 중국 내 및 해외에 동시에 출시하는 혁신 의약품 특허에 대해 특허권 존속기간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디자인권) 부분디자인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디자인 보호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